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 2007 Edition

Summary in Korean

경제정책개혁

경제성장 목표: - 2007 년도판

국어 개요

개론

지난 10년 동안 대다수 OECD 국이 선두국과의 1인당 GDP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의 핵심 동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재평가 작업이 요구되었다. *경제성장 목표*는 각국의 공공 정책과 그 결과의 체계적인 비교작업을 통해 OECD 국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년 전에 개시했던 바다. 다른 국가를 그대로 모방하는 식의 퇴보는 바람직하지 않겠으나 다른 국가의 성공, 실패 사례에서 교훈점을 도출함은 강력한 발전을 향한 길이다. 사회적 우선사항에 관한 OECD 국간의 실제적 격차는 감안해야 하겠으나 각국 상황이 유일하다는 점이 비효율적인 정책 지속을 두둔하는 편리한 구실로 쓰여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 목표 제 1 판은 경제 성과와의 연관성이 뚜렷이 밝혀진 구조정책지표에 기초한 신형의 감독 벤치마킹 시대를 열었다. 폭넓은 경제 영역에 걸친 성과 측정과 상세한 OECD 위원회 및 전문인 분석에 더한 구조정책지표 활용은 OECD 국별로 일련의 5대 우선정책을 도출시켰다. 2006년 발간한 *경제성장 목표* 제 2 판에서는 우선사항으로 확인된 정책영역에서 이룬 진전도를 살펴보고 혁신 촉진 정책을 감안하고자 구조 감독 실시의 기초가 되는 지표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 1 판처럼 *경제성장 목표 2007 년도판*에서도 유럽연합 전체와 각국별로 향후 1인당 GDP 성장을 활성화할 것 같은 우선 정책사안을 5가지 확인시킨다. 우선 정책사안의 적어도 3가지는 국간 비교가 가능한 정책 여건과 성과 지표에 기초한다. 나머지 둘은 반드시 지표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국 특유의 전문분석에 의존함으로써 양적 지표 평가가 항상 가능치 않은 일부 중요한 정책분야까지 포착할 수 있다.

제1 장에서는 최근 해에 드러난 OECD 경제성과의 전반적 추이와 특징의 성과 부진을 해소하고자 확인시킨 우선 정책사안을 살펴본다. 제2 장에서는 이러한 우선 정책 영역을 배경으로 제시한 특정 권고사항을 각국 평가서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며 제3 장에서는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된 일련의 정책 지표를 소개한다. 각국 평가서에는 확인된 문제를 해결토록 실시한 초기 방안에 관한 정보와 함께 새로운 권고사항이 제시된다.

고실업과 저조한 노동 참여 비율이 다수 유럽국가의 주요 우려사항인 만큼 이들 경제국은 우선 정책사안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의 성과 제고 방안을 관련한다. 일본, 스위스 같은 저소득 국가는 생산성 증진이 주요 당면과제로 대두되면서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특히 네트워크 산업 및 서비스와 관련한 생산시장의 자유화에 보다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영어권 국가는 노동시장 성과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특히 중등교육 증진을 통한 노동자 기술 제고가 공통으로 요구된 사항이다. 끝으로 다수의 유럽연합국이 고등교육제도를 강화하여 졸업률 그리고/혹 교육과 연구실적 품질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입장이다.

제4 장에서는 고용 전략의 재평가 작업 여건에서 추진한 최근의 OECD 연구 결과와 노동시장과 관련한 폭넓은 연구 자료를 토대로 고용 차원의 결과 기록에 기여한 정책과 제도를 일부 확인한다. 지난 10년간에 걸친 노동시장의 성과 변화를 간단히 살핀 후 노동 수급을 통해 전체 고용과 특정 고용층에 미쳐진 주요 정책의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거시경제 정책의 역할과 현존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가설상의 개혁으로 OECD 국이 얻을 수 있을 이익을 검토한다.

지난 20년 동안 국간의 실업추세 분산은 평균 절반이 정책적, 제도적 변화에 기인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고액의 실업수당, 고용시의 높은 조세성 비용, 엄중한 반경쟁 생산시장규제 (PMR)는 실업 증가와 노동 참여 저하를 유발한다. 이에 반해 고도로 집중적이거나 조정된 임금협상체제는 적극적 노동시장 계획(ALMPs)에 대한 일부 공공 지출 범주와 마찬가지로 실업 감소에 유용해 보인다. 각종의 다른 일괄정책 적용으로도 고용 차원에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이로 전반적인 경제 성과나 공공 재정 차원에서 받는 영향은 반드시 동일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 정책 외에 특유성을 지닌 정책방안으로도 장년근로자, 여성, 젊은층 등 일부 인구층의 고용 전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로 공공연금제도에 반영된 조기퇴직 유인책, 기타 사회이전계획은 장년층의 고용을 저하하고 육아 보조금은 여성 참여를 촉진하는 반면 아동 수당은 이를 감축시키며 마찬가지로 너무 높은 최저임금 설정은 젊은층의 고용 전망을 악화시키기 쉽다.

제5 장에서는 경쟁억제적인 상품시장규제가 모범 생산기술관행의 전세계적 확산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면서 상기 규제가 2003년까지 지나온 변천과정, 지난 10년간 ICT의 급속 발전에 맞서 생산성 격차를 따라잡는 데 끼친 영향, 그리고 경쟁강화정책이 경제성장 증진과 OECD 국간의 생산성 수렴 달성에 어떤 역할로 기여했는지 등을 살핀다. 상품시장의 자유화를 향한 전반적 추이에도 비제조 분야의 규제는 여전히 경쟁을 제한하는 실정이다. 경쟁억제적인 상품시장규제는 모범 생산기술관행 도입을 늦추기 때문에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부 산업 부문에서 첨단 기술에 한참 뒤떨어진 국가 경우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제한적 규제는 최소 2 가지 경로를 통해 신기술의 확산을 지체시킨다. 즉 최신 ICT를 포함한 장비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외국의

기술 확산을 감퇴한다. 예로 1995-2003 년 경쟁에 저해된 규제가 각 분야별로 OECD 국의 가장 가벼운 규제수준에 있었다는 가정하, 조사 국가의 절반 경우에 연간 생산성 증가율이 적어도 0.75% 더 높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제6 장에서는 최근 OECD 국가별로 실시한 경제전망의 심층 검토를 토대로 현재까지 이룬 진전보다는 여전히 남은 경쟁의 장애물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가운데 경쟁에 영향을 주는 정책방안 조사에 나선다. 결론을 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평 협정은 경쟁법상 금지된 사항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재수준이 이 행위의 억제 수준에 못 미치며, 민간소송의 여지는 한정되어 있고 카르텔 회원의 탈퇴를 유도하는 법적체계가 미비된 상태다. 한편 정부 관련 기관 및 회사에는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간회사와의 경쟁이 왜곡된 국가가 더러 있다.

아울러 몇몇 국가 경우, 경쟁이 여전히 규제로 한정받는 분야가 적잖이 있다. 이는 소매 유통과 전문 서비스 분야에 현저히 드러나며 규모 경제, 서비스 교역, 노동 이동 차원에서 특히나 얻을 수 있는 잠재 효율성 이득을 저해한다. 네트워크 산업에 남아 있는 당면과제는 상이한 소유구조(내국인/외국인, 공공/민간)의 기업간에 특히 네트워크 진입에 있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 민영화된 독점 국유기업의 소유자에게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OECD 국가정부는 구조개혁에 착수하여 경제성장, 고용, 공공재정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국이 확장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널리 인정된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별로, 정책 분야별로 이룬 진전은 고르지 못한 상태다. 감안할 가치가 있는 여타 경제 외 목표와의 상충관계가 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으나 개혁의 심도, 범위, 시기상의 격차는 정책상의 제약을 시사하기도 한다. 개혁에 대한 저항 뒤에 숨겨진 원인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의 해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른바 ‘구조개혁 정치경제’의 핵심부가 된다.

제7 장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 사안을 주제로 하여 OECD 국의 개혁 양식을 간단히 살펴본 후 정책 및 경제 여건이 상품·노동시장의 개혁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최근의 OECD 연구결과를 검토한다. 구조개혁 시행에 영향을 주는 일부 요인의 입증 사례를 살펴보면 OECD 감독 과정에서 강조된 경제개혁의 지난 경험으로 일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교훈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첫째, 시장지향적 개혁이 총소득 촉진에는 유용한 반면 보완적 보상 체제가 없는 이상 일부 계층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제분석이 가능하다. 정책변화의 편익비용과 경제목표와 경제외 목표 간의 상충에 따른 복합성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조장하는 주원인임을 감안하면 구조개혁 성공에는 이해가 쉽고 투명한 설명이 절대 필수인 바다.

둘째, 개혁으로 보는 이득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한 널리 흩어져서 드러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통상 인식된 반면 변화로 손해 볼 입장인 자들은 서로를 쉽게 알아 보고 협력하여 개혁을 막기에, ‘현상태 독재’를 조장한다. 개혁 부문의 집단 행위와 대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바로 위기가 제도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되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무활동에 따른 비용이 명백할만큼 과중해지면서 개혁의 단기 비용이 작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도록 차라리 적시에 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바다.

제 6 장에 소개된 실증적 연구결과는 소국가일수록 적시 개혁 도입에 보다 재빠르고 정통하다는 밝은 전망을 내보인다. 또한 소국가들은 정치체제가 정부 안정에 도움이 되는 편이고 재정 상태는 손실계층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가능할만큼 충분히 튼튼해 보인다는 결론이다. 다른 개혁에 비해 수월히 실시할 수

있을 개혁이 일부 있다. 예로 금융시장과 국제무역의 자유화, 어느 정도의 상품시장 자유화는 노동시장 개혁에 비해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사안인 듯하다.

© OECD 2007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